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

Commemorative Program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2007 October 4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 노무현 전대통령 특별연설 |

Address b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일시 | 2008. 10. 1(수), 18:00~20:30

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위원회



만찬 프로그램 Program

시 간	주 제
18:00	오프닝 영상
	개회사: 이재정 위원장
	축사
	축하영상: 반기문 UN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연설
	건배제의
	만찬
	공연: 안숙선, 김원중
20:30	폐회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대북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 밖에 독재 시대에는 반공, 안보, 승공통일, 이런 냉전 논리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와 민주화 이후에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느 목표도 치열한 갈등의 소재가 되었을 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어느 목적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너무 빈약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인식과 자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대북정책으로 거론이 되어온 주제들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통일 논의, 이대로 좋은가?

| 통일인가? 평화인가? |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은 지상의 명제입니다. 이 논리대로 가면 통일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요?

평화는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입은 손실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

통일이든 평화이든 모두 이념적 성격과 현실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은 이념적 포장이 많은 반면에, 평화는 이념의 포장이 없습니다. 평화는 생생하고 절실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 평화통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짐하자. |

지난날 북진통일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같은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다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 평화를 대북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분단 고착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통일 전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 구조에는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일방안의 일환으로서, 또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가치로서, 대북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설정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을 말하고, 평화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 정착에 진전을 볼 수 있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을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의 의미를 냉정하게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연합, 연방, 단일국가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신설통합이나, 어느 한 국가로 나머지 국가를 흡수하는 흡수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함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소멸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국가는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 실체라는 것이 근대 이래의 국가이론입니다. 그 위에 권력은 종교, 또는 이념으로 정당성을 포장합니다. 나라를 분열하여 분단 정권을 세울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을 훼손하는 양보를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양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일부 국가 권력의 붕괴로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역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 수립과, 유럽의 통합을 합의에 의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의미와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분단국가의 통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전쟁이라는 역사적 성공을 이룬 동업자들 간의 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한발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제 치하에서부터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해방 정국에서 권력투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단 정부의 수립 후에도 세계 냉전 체제의 첨단에 서서,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벌여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합의형 통일을 이룬 예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재분열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한 바 있어,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일을 말할 일이 아닙니다. 진지한 자세로 통일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색하고 이야기 해 봅니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가능한 일인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국가의 통일, 민족의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이념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 평화통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금기를 깨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
-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협상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중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지하고 책임 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투적인 권력투쟁, 이념 투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분단의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패권경쟁, 국제적·국내적 이념 대결의 결과입니다. 이들 분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분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 원인을 극복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계의 패권경쟁, 이념 대결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대결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를 대결의 질서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방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영외교, 일방외교는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 이념 대결을 넘어서자.

이념 대결의 틀 안에서 이념 대결로 빚어진 분단을 합의로 극복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승공통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국가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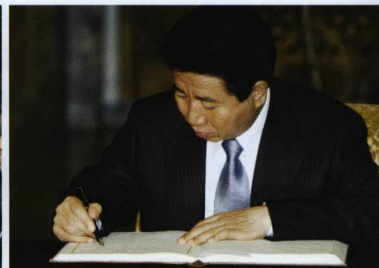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

남북 통합은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파가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부닥치면 사사건건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르지 않더라도 실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략 논쟁도 아니고 논리적 비판도 아닙니다. 빨갱이 만들기, 친북좌파 만들기 같은 맹목적 이념 대결과 정치 공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생긴 분단을 넘어서자고 하면서 이념 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달라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이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국민의 힘이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가치와 전략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과 정권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을 양보하여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국민적 힘을 말하고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남북관계는 지금 협상의 국면에 있습니다. 흔히들 외교적 수완, 또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협상의 요체가 무슨 기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교나 협상은 결코 기술이나 수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존중해야 할 일반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실제로 남북 간 협상에서는 정통성에 관련되는 발언 시비로 협상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거나 협상에 들어가서도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과 비난을 일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 상대방의 목적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협상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진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진실한 사실과 사리에 맞는 논리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전략적 발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을 위한 거짓말이나 억지 주장은 협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기 싸움을 하거나 국내 정치용이나 국제사회 명분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사리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일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국가 간의 협상결과는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엄숙하고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뒤집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 결정적인 열쇠는 신뢰이다. |

신뢰 없이는 아무 것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신뢰, 진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이다. 믿을 수 없는 상대를 두고 신뢰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 지 모릅니다. 상호불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은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뢰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상대를 신뢰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신뢰가 무너져도 낭패가 되지 않을만한 일, 상대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한 일, 이런 일부터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역지사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에 관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

■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서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고,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 국가보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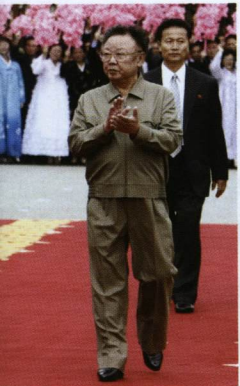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답이나 토론에 나가보면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당장 시비가 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연방제 문제도 언론과 국회에서 종종 시비 켜리가 됩니다. 연방제 주장이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는 국가보안법 판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시다. 그 중 대부분은 시비썩리를 만들거나 보도하기 위한 것이 었습시다.

‘합리적이다.’ ‘명석해 보인다.’ 이런 대답을 하면 당장 국내에서 큰 시비가 걸립시다. 법적으로는 찬양, 고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의 상대방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념 공세입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 9.19 선언과 10.4 선언에 관하여

지난 2005년 9.19 선언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 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 10. 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 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부담이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 복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 저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좀 초조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게' '퍼주고' '끌려 다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 다니다, 이런 비난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결과로서 신뢰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 지금도 상대를 자극하고 신뢰를 흔드는 일이 많다.

한미 동맹은 본시 대북 역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목적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국력의 차이와 냉전 구도의 변화로 대북 역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의 국면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역지를 위한 한미동맹과 관련된 수사적인 표현의 수준을 있는 대로 높여서 강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역지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일본까지 끌어넣어 더불어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이념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을 굳이 주적이라 명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북 간에 신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P.S.I와 M.D에까지 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우리도 그 한쪽에 가담한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대화를 촉진하는 길이 될까요? 이것을 평화통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석권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 전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일만한 내용입니다.

작계 5029는 전쟁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 할만한 민감한 것입니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작계 5029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작전 계획이 필요한 것일까요? 설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 역지사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송전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목을 조를 수 있는 일이라서 선뜻 받아들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강 하구나 휴전선 이남에 합작 공단을 조성하지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운 제안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당선자 시절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굴복을 받기 위한 전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가들은 나의 발언을 서투른 아마추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전술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말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 작전 통제권의 환수

자주국가라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비꺼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크기를 평가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일 것입니다.

BDA만 아니었더라면 정상회담은 훨씬 일찍 열렸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훨씬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말 뜻 그대로라면 당연한 사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개성공단 투자는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해주공단, 안변 조선공단, 이런 것이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 평양 간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에는 시비가 많았습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화와 협력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사용되어 온 용어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왜 끌려 다니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런 비난의 뒤에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옵니다.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 실용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이 말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실용주의인가요 이념주의인가요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실용주의 운운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헛갈립니다.

Ⅰ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Ⅰ

이런 저런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협상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등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험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화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김정일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airman Kim Jong Il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ident Roh visited Pyongyang from October 2-4, 2007.

During the visit, there were historic meetings and discussions.

At the meetings and talks, the two sides have reaffirmed the spiri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had frank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realizing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mmon prosperity of the Korean people and unification of Korea.

Expressing confidence that they can forge a new era of national prosperity and unification on their own initiative if they combine their will and capabilities, the two sides declare as follows, in order to expand and advance South-North relations based o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1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phold and endeavor actively to realize the June 15 Declaration.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resolve the issue of unification on their own initiative and according to the spirit of "by-the-Korean-people-themselves."
-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work out ways to commemorate the June 15 anniversary of the announcemen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o reflect the common will to faithfully carry it out.

2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firmly transform inter-Korean relations into ties of mutual respect and trust, transcending the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ystems.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other and agreed to resolve inter-Korean issues i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overhaul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apparatuses in a bid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in a reunification-oriented direction.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proactively pursue dialogue and contacts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legislatures of the two Koreas, in order to resolve matters concerning the expansion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a way that meets the aspirations of the entire Korean people.

3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losely work together to put an end to military hostilities, mitigate tensions and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not to antagonize each other, reduce military tension, and resolve issues in dispute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oppos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dhere strictly to their obligation to nonaggression.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hold talks between the South's Minister of Defense and the North's 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in Pyongyang in November to discuss ways of designating a joint fishing area in the West Sea to avoid accidental clashes and turning it into a peace area and also to discuss measures to build military confidence, including security guarantees for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4 The South and the North both recognize the need to end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and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lso agreed to work together to advance the matter of having the leaders of the three or four parties directly concerned to convene on the Peninsula and declare an end to the war.

With regard to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work together to implement smoothly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2007 Agreement achieved at the Six-Party Talks.

5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facilitate, expand, and further develop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n a continual basis for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and co-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ommon interests, co-prosperity and mutual aid.

- The South and the North reached an agreement on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investments, pushing forward with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Given the special nature of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grant preferential conditions and benefits to those projects.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reate 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encompassing Haeju and vicinity in a bid to proactively push ahead with the creation of a joint fishing zone and maritime peace zon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utilization of Haeju harbor, passage of civilian vessels via direct routes in Haeju and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omplete the first-phase construc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t an early date and embark on the second-stage development project.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open freight rail services between Munsan and Bongdong and promptly complete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passage, communication,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discuss repairs of the Gaeseong-Sinuiju railroad and the Gaeseong-Pyongyang expressway for their joint use.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establish cooperative complexes for shipbuilding in Anbyeon and Nampo, while continuing cooperative projects in various areas such as agricultur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upgrade the status of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to a Joint Committe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be headed by deputy prime minister-level officials.

6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boos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social areas covering history, languag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and arts, and sports to highlight the long history and excellent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carry out tours to Mt. Baekdu and open nonstop flight services between Seoul and Mt. Baekdu for this purpose.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send a joint cheering squad from both sides to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The squad will use the Gyeongui Railway Line for the first-ever joint Olympic cheering.

7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actively promote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expand reunion of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their relatives and promote exchanges of video messages.

To this end,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station resident representatives from each side at the reunion center at Mt. Geumgang when it is completed and regularize reunions of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their relatives.

-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actively cooperate in case of emergencie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fraternal love, humanitarianism and mutual assistance.

8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increase cooperation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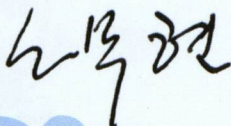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hold inter-Korean prime ministers' talk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have agreed to hold the first round of meetings in November 2007 in Seoul.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hat their highest authorities will meet frequently for the advanc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Oct. 4, 2007 Pyongyang


Roh Moo-hyun

President,
Republic of Korea



Kim Jong Il

Chairm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2차 UN 총회 결의안

2007. 11. 1.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

총회는, 남북정상회담 및 2000.6.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에 의해 채택된 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2000.10.31자 결의 55/11을 상기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며,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역내 및 그 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2007.10.2~4간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간 정상회담 및 10.4 채택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인정하며,

2007.10.1 사무총장 및 총회의장의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과 함께 2007.10.4 남북 정상간 선언에 대한 사무총장의 환영성명을 상기하며,

1. 2007.10.2~4 간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및 2007.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에 의해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동 선언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남북 간 대화, 화해 및 통일과정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동 과정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



62차 UN 총회 결의안

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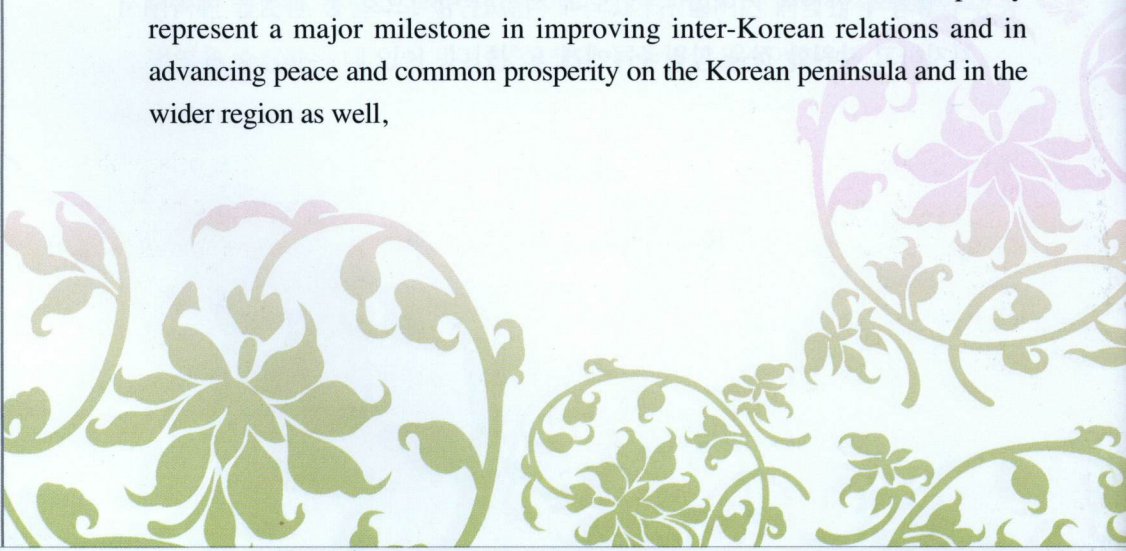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5/11 of 31 October 2000, in which it welcomed and supported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joint declaration adopted on 15 June 2000 by the two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onvinced that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are essential for consolidat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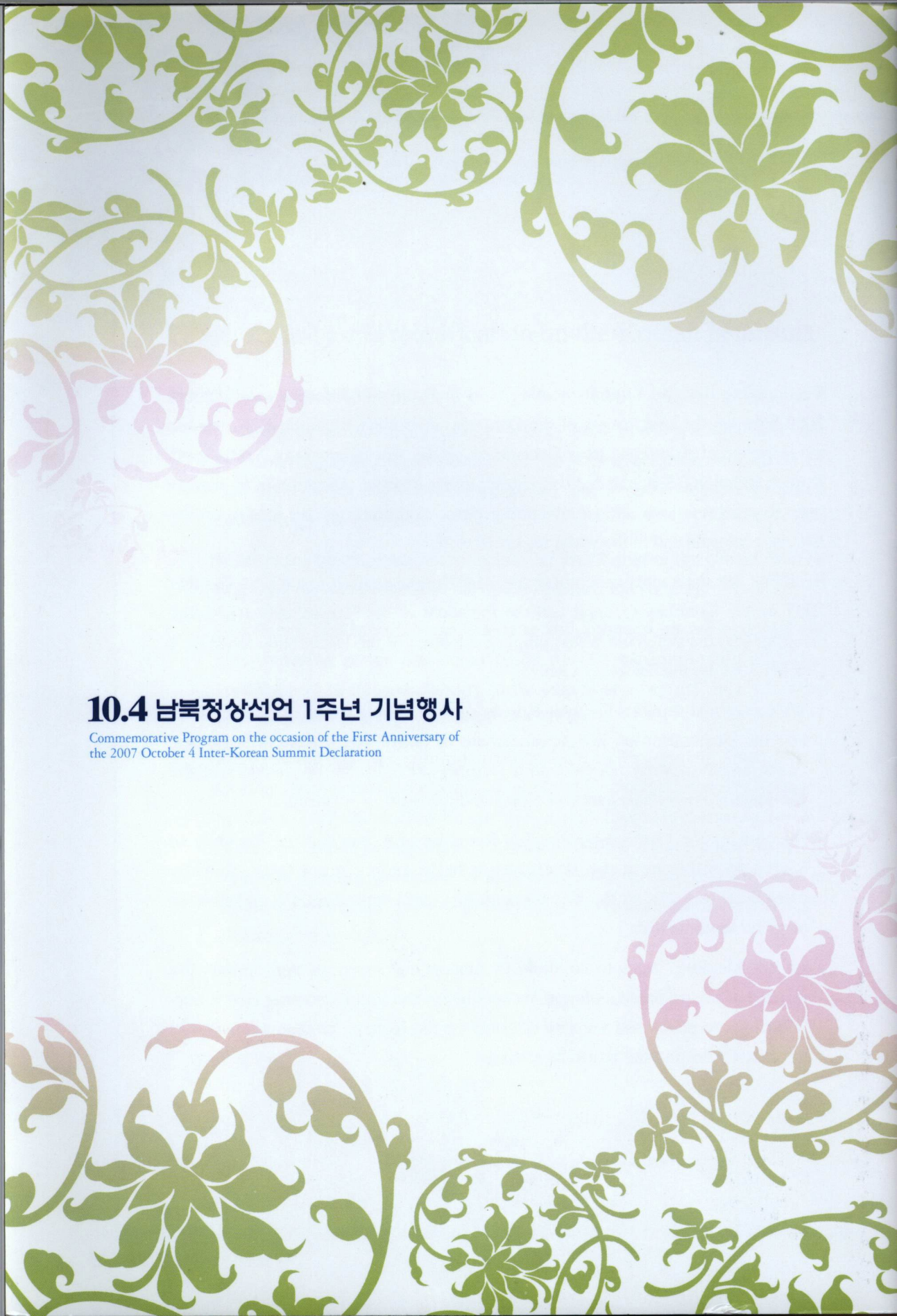
Recognizing that the summit meeting held in Pyongyang from 2 to 4 October 2007 between the two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represent a major milestone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in advancing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ider region as well,



Recognizing that the summit meeting held in Pyongyang from 2 to 4 October 2007 between the two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represent a major milestone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in advancing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ider region as well,

Recalling the statements welcoming the inter-Korean summit made on 1 October 2007 by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recalling also the statement welcoming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made on 4 October 2007 by the Secretary-General,

1. Welcomes and supports the inter-Korean summit held from 2 to 4 October 2007 and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adopted on 4 October 2007 by the two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2. Encoura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the Declaration fully and in good faith, thereby consolid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3. Invites Member States to continue to support and assist, as appropriate, the process of inter-Korean dialogu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 a whole.

A decorative border with a repeating floral and vine motif in shades of green and purple, framing the central text area.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

Commemorative Program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2007 October 4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